□ 육계계열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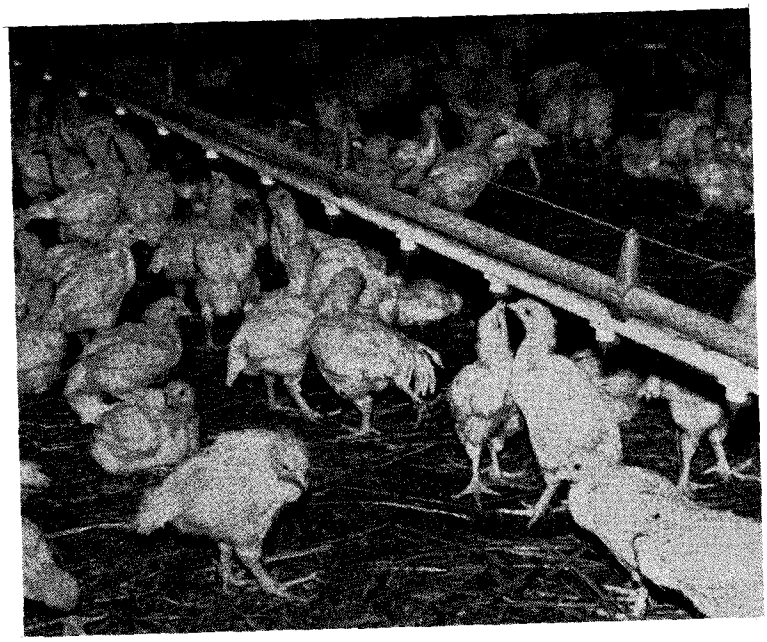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인하 못하는 부분통합단계

김용화／편집과장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있어 계열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주로 양계산업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기 보다는 학계나 연관단체에서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도입코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다른 축산분야보다 계열화사업에 대한 도입을 일찍 시도했던 양계업계에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생산자들이 속시원하게 이렇다할만한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구조의 특수성 때문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유통에 대한 근대화가 추진되지 못하여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중간상인이 단계마다 관여하는 다단계식 시장구조로 인하여 가격등락이 심화되자 계열화사업이 접목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다급해진 생산비인하 문제를 선결과제로 내세워 지지부진했던 육계계열화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급진전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제통합원리에서 다소 거리감은 있으나 생산비 인하에 대한 제몫을 하리라고 기대를 걸었으나 대부분의 계열화업체들이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측면 즉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건국대학교 김정주교수가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의 요청으로 육계산업의 계열생산체계 발전현황분석에 대한 중간결과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계열화 현황

현재 한국의 육계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천호인티그

레이션(주)를 포함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계열화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3~4개 업체의 계열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완전통합상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85년부터 육계 계열화 생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88년까지 9개 계열주체를 대상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조절기반확충에 기본목표를 두고 217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계열화에 의한 육계의 생산실적을 보면 85년에 126개 농가 참여로 250만수에 지나지 않던 것이 89년에는 330개 농가의 참여로 16,600천수에 이르고 있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이른다. 이처럼 계열화 생산에 시장점유율은 작지만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Ⅱ. 사육계약형태

(1) 개별계산형 : 계열주체가 병아리와 사료 등 주요 생산자재만 공급해주면 사육과 판매는 사육농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 이는 사육단계를 중심으로 한 전반 통합으로서 완전통합을 향한 하나의 부분통합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형태는 생산자재의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경영에 따른 위험이 모두 사육농가에게 귀속되므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미흡한 방법이다.

(2) 이윤배분형 : 계열주체가 사료나 병아리를 약정된 가격으로 사육농가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개별계산형과 동일하나 생산된 계육도 약정된 가격으로 사육주체가 구매해 줌으로서 농가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형태는 사육농가가 경영을 주도하면서도 경영에 수반된 위험부담을 계열주체와 분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요소 및 생산물의 판매·구매가격을 약정하는 일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가격의 진폭이 심한 계육의 경우에 더 심하다.

(3) 사료효율형 : 계열주체가 사료, 병아리, 약품, 연료비 등 일체의 생산자재를 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사육에 따른 기술지도 뿐 아니라 유통·판매까지 계열주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모든 경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계열주체가 맡음으로서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사육능력에 따라 사육비를 차등 지급하는 능률급제를 도입함으로서 노력하는 대가가 소득으로 돌아갈수 있어서 생산성도 개별경영보다 향상될 수 있다.

수입개방이 더욱 불가피해지는 상태에서 육계산업의 자구책으로 계열화사업의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생산비는 다소 낮아진듯 하나 소비자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을 보여 아직도 완전통합의 계열화는 시도되지 못하고 시작단계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주체가 장악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져 마치 농민이 농업노동자로 절락한 것같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사육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를 정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Ⅲ. 문제점과 개선대책

(1) 계열화 생산에 있어서 대두되는 중요한 첫번째 문제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가 경영체에 예속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봉건시대의 소작제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사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계열화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렸던 횡포 사례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자행되었던 악덕 지주들의 소작인 착취 행위가 연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로부터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주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가가 경영체와 계약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협동조합이 계열화 생산의 계약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경영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일, 세제를 개선하는 일, 농가에게 필요한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일 등을 맡아 줌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민이 살아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계열화생산을 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이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계열화 생산을 주도한다면 주체의 이익금 착취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수 있어 유리하다. 허나 협동조합이 과연 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보호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에 매진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한다면 계열화 생산체계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이미 축협이나 농협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유통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계열화 생산을 향한 부분적 계열화 생산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용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수송, 저장, 가공, 판매는 협동조합이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협동조합의 이상이요, 이것이 바로 계열화 생산의 골격이다.

(3) 사육수수료를 기본사육비와 능률급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계약사육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과급제도는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 좋은 방법이나 평가기준이 되는 사료요구율이나 생존율 등이 경영주체와 사육농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는 양자간 분쟁의 여지가 남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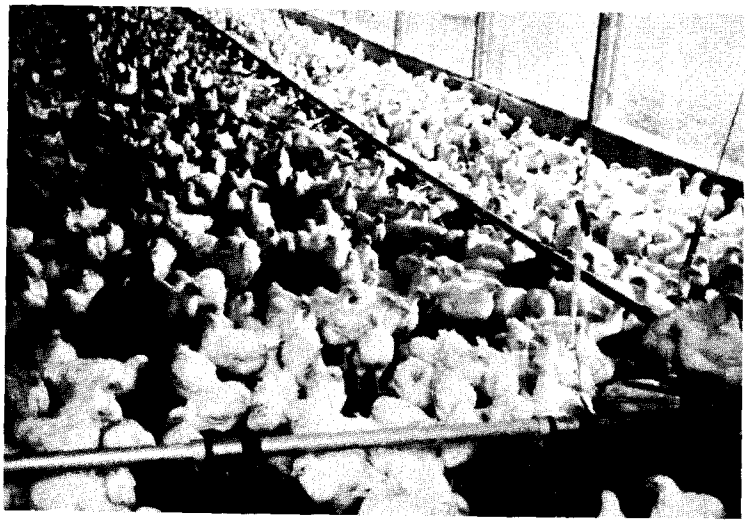
특히 약추나 저급사료에 의한 생존율, 사료요구율 시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을 정함에 있어 품종별, 계절별, 사료별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50~100g 단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사료요구율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4) 경영주체와 사육농가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문서화된 계약서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양계산업의 경기가 침체될수록 계약불이행의 여지는 더욱 많아져서 사육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계열화 생산에서 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는 정작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계열화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보다는 주변의 지식인층으로부터 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명분론에 충실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농가가 계약에 충실하지 않을까를 염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계열화 생산의 선두주자격인 몇 회사가 어려웠던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육농가 측에서 생산물의 시세가 좋으면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시세가 나쁘면 제3자의 생산물을 구입하여 추가시킴으로써 경영체의 수지가 악화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체와 사육농가간의 문서화된 계약서 보다는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공생공존한다는 협동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Ⅳ. 생산비 비교분석

육계의 생산비 분석은 축협이 매년 3천수 미만, 3천~7천수, 7천수 이상 규모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89년도 육계 생산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육계 kg당 생산비는 912.6원으로 88년 787.4원에 비해 1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증가원인을 보면 노임이나 지가가 각각 38%, 59%씩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사료비로서 58.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초생추비가 20.5%로서 수익성은 이 두가지 생산요소에 의하여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육계의 사육규모별 생산비를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는 감소하여 결국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순수의 개념으로 비교한 결과 3천수 미만의 소규모에서는 143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7천수 이상 규모에서는 135원의 순수익을 나타내 평균 98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득의 개념으로 비교한 결과 3천수 미만의 소규모에서는 수당 176원이, 7천수 이상의 대규모에서는 324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계열화 생산에서의 1수당 사육비 약 200원과 비교해 보면 독립경영체의 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육계의 계열화 생산에 의하여 최종 소비재(가공된 육계제품) 생산비를 인하시켜 계육이 수입자유화되어도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계열주체간의 차이는 있으나 kg당 생산비가 850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완전계열화 상태로 가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소비자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어도 기존 생산자의 반발이커 물량확보 경쟁만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경영상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육계인의 좀더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완전통합 수준으로 향상,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양계